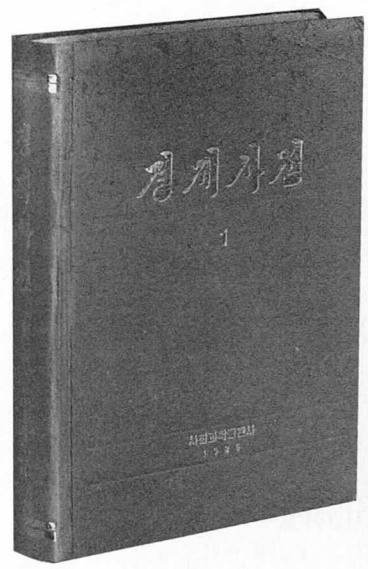
'정치 우선'의 기본논리 반영

북한 「경제사전」을 보고

鄭雲暎
경제평론가



북한 지적 수준 기계적 유추 피해야

사전의 사회학, 그런 개념이 성립될 수 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사전의 발간도 어느 한 시대와 그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할 것 같다. 실제로 사전이 언어(辭典)나 사건(事典)에 대한 가장 풍부한 지식의 창고라면, 순서로 보아 그 창고에 입하될 대상들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가 넓고 깊게 진전되어 있어야만 사전의 편찬이란 지난한 작업이 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비는 물론 사회 전반의 발전 수준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예컨대 인류문화의 寶庫라느니 문명의 금자탑이라느니 하는 향기로운 찬사들이 그치지 않는 그야말로 걸작(chef-d'oeuvre)들은 대체로 이와같은 단단한 기반 위에서 완성된 것들이다.

그에 비해 어떤 특정 목적의 시급한 과제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 내지는 기초자료의 기능으로 사전 간행이 실현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 세력이 식민지의 수탈을 위해 가장 먼저 착수했던 '문화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사전의 제작이었음을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향기롭지 못한 의도에서 만들어지는 사전은 그 내용이 지극히 조잡하고 일방적이기 일쑤이고, 따라서 그러한 길잡이로 이해하는 현실은 엄청나게 왜곡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사전들이 몰려오고 있다. '조선말'에 대한 사전 뿐만 아니라 철학 · 역사 · 정치 · 경제 등의 '과학'사전들까지 우리의 주변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소문과 느낌으로만 '무책임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사전들은 북한이 성취한 학술진보와 교양강화의 상당한 부분을 – 비록 집대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남한의 경제학사전이 남한의 경제학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식의 생산이 대체로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북한사회에서 사회과학원 산하의 해당 연구소들이 편찬한 각종 사전은 그 경우가 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들만으로 북한의 학문이나 문화 일반의 내용과 형식을 기계적으로 유추하려는 경솔은 피하도록 권고하고 싶다. 예컨대 뉴욕의 마천루 사진만 들여다보면 그 뒤의 할렘을 놓치게 되고, 마찬가지로 카이로 거리의 말똥 사진만 바라보다가는 그 옆의 피라미드를 지나치게 된다. 대강대강 훑어본, 아니 솔직하게 고백해서 건성건성 들추어본 「경제사전」만도 그 분량이 무려 1,700여쪽이 넘는데, 무슨 수로 거기서 마천루와 말똥, 혹은 할렘과 피라미드를 고루 다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단 말인가? 요설이 다소 길어졌지만 요컨대 비록 향기롭게 만든 책이라도 향기롭지 않게 읽힐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만큼 우리만이라도(!) 조심해서 이 위험을 예방해보자는 다짐의 뜻이다.

'퍽 많이 다르다'는 느낌

북한의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가 1970년에 '집체적으로' 편찬한 「경제사전」(우리의 개념으로는 '경제학사전'이 된다)의 영인본(이성과현실, 1988 간행)을 받아든 최초의 소감은 '퍽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북한의 경제가 남한에서 가르치는 자본주의의 경제원리와는 전혀 상이한 운동법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전이 주는 생경함은 가시지 않았다. 우선 그것은 남한의 기준으로는 의당 '정치적'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항들, 예컨대 '남조선혁명'이나 '김옥균' 등의 항목이 경제사전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되었다.

다른 사전의 경우도 비슷하리라고 짐작되는데, '현대부르죠아 경제학'이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과 같이 아주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몇개의 사항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항목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사전의 Ⅰ부에는 이 '경애하는 수령'이 빠져 있고 Ⅱ부에는 반드시 들어가는데 혹시 현재 영인되어 나온 이 두 책의 출판연도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말과 함께 고딕체로 인쇄된 「김일성 선집」이나 「김일성 저작선집」의 한 귀절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자본'의 항목은 "잉여로동의 착취에 기초하여 자기를 증식하는 가치"라는 설명이 나오고 이어서 예의 그 교시가 따르는데, 그 내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몇놈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생산물도 독차지하기 때문에 로동자

북한경제가 남한의 경제원리와 상이한 운동법칙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북한의 사전이 주는 생경함은 가시지 않는다. 항목선정의 불균형, 지나친 김일성주의의 추종 등은 남북간의 이질성 극복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든다.

들은 생산에서 열성을 낼 수 없으며 다만 굶어죽지 않기 위하여 자기의 로동력을 자본가들에게 팔 뿐입니다. 자본가들은 오직 돈과 채찍으로써 로동자들을 부려먹습니다"로 되어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의 '자본가계급'의 항목에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하여 임금로동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지배계급"이란 설명과 함께 위에 인용한 바로 그 교시가 그대로 실려 있다.

더구나 '강서군당의 사업지도'나 '모든 것을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처럼 김일성의 주요 지시나 보고가 독립된 항목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이색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정치 우선'이라든가 '주체사상의 선도'와 같은 사회조직의 가본논리들이 사전편찬에 그대로 투영된 결과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태도는 때때로 설명의 내용에까지 연장된다. 예컨대 '경제성장론'은 "…자본주의 경제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허위적 리론을 조작하여 자본주의의 영원성을 증명해보려는 반동적 부르죠아경제리론"으로 소개되고, '국제부흥 개발은행'(이른바 세계은행 혹은 IBRD)에 대해서는 "…미제의 경제적 침략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는 침략기구이다"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이보다 한참 더 '험악한' 단어들도 출현하는데, 글쎄 점잖지 못하다고 해야 할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할는지는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다.

소련 경제학사전보다도 경직돼

그러나 이론의 어느 핵심적인 부분이 논의의 대상으로 등장할 때에는 그렇게 한가하게 '믿거나 말거나'로 끝낼 수가 없는데, 이 경우 '가치법칙'이 그에 대해 아주 적당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실제로 가치법칙은 상품생산에만 고유하게 작동하므로 그 적용을 자본주의사회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그에 맞서 사회주의사회에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는데, 이러한 이론투쟁 – 여하튼 스탈린 시대에는 이 '이론'의 문제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이 있다 – 이 사전에서는, 아니 김일성의 교시에서는 "…여기서는(북한에서는 : 인용자) 가치법칙도 상품생산에서처럼 내용적으로가 아니라 형태적으로 작용한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 결론이 과연 '창조적'이냐 '수정적'이냐에 대한 시비(?)는 다시 독자에게 일임할 수밖에 없어 참으로 민망하다.

항목 선정의 기준은 같은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에서 간행된 경제학사전보다도 한결 경직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 부르주아 경제학자로서는 리카도와 케네 정도가 구제되고(?), 슘페터나 케인즈까지도 탈락의 비운을 맞는다. 사회주의 경제학자 중에서도 트로츠키와 부하린은 물론 毛澤東까지도 간택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다. 나아가서 '시장'에 대한 항목은 3개인데 반해 '건설'과 '기술'에 대한 항목이 각각 22개와 31개로 편성되어 있다거나, 농업이나 농촌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점 등도 특기할 만하다.

전편을 통해 단 하나의 그래프도, 단 하나의 도표도, 방정식조차도 거의 없이, 오로지 말로써 설명을 일관하는 그 우직함에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 그리고 언어의 변화에서 오는 의미의 단절도 심각한데, 세소어업(연안어업), 오작품(불량품), 막팔기(덤핑), 시조축적(원시적 축적), 조월공사(이월공사), 공장닫아매기(공장폐쇄), 공장일식수출(턴키 베이시스 수출), 어미회사 – 딸회사 – 손자회사 정도면 그래도 눈치보며 따라갈 만한데, 예컨대 경제성분, 새 중농, 민족기술간부, 굴진선행의 법칙이 나오면 아예 무지에 대해 자수하고 광명찾는 게 빠르다.